

서울신문

파주 대성동 마을서 구석기 유물 발견

입력 : 2020-06-09 20:34 | 수정 : 2020-06-10 03:14



▲ 파주 대성동마을 실태조사에서 수습한 구석기 시대 뿔석기.
문화재청 제공

비무장지대(DMZ) 내 최북단 마을인 경기 파주 대성동에서 구석기시대 뿔석기 유물이 발견됐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를 중심으로 구성된 비무장지대 문화·자연유산 실태조사단은 지난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파주 대성동 마을에서 진행한 첫 실태조사에서 구석기시대 석기를 비롯한 다양한 유물을 수습했다고 9일 밝혔다.

마을 남쪽 구릉 일대에서 확인된 석기는 뿔석기 2점이다. 사냥하거나 물건에 구멍을 낼 때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찌르개와 날을 세운 석기인 찌개류의 깨진 조각으로 추정된다. 뿔석기는 2004년 개성공업지구 문화유적 남북 공동조사 때도 1점이 발견돼 남북 고고학계가 주목한 바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임진강 유역에서 적지 않

은 구석기시대 유적이 조사된 바 있고 특히 대성동 마을과 북측의 기정동 마을은 서로 마주 보고 있어 앞으로 남북공동 조사가 이뤄지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마을 서쪽에 흙을 쌓아 만든 태성(台城)은 비교적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서 방향에 문지(門址·성문이 있었던 자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서문지와 외곽 둘레에서 고려·조선 시대 토기와 기와 조각이 수습됐으며 시기가 이른 유물도 발견됐다.

조사단은 마을 주변 8곳을 매장문화재가 묻혀 있을 유물 산포지로 설정했다. 드러난 지표면에서 고려~조선 시대 기와, 도자기 조각 등이 발견됐고, 접근이 어려운 구릉에서도 봉분 등이 나타난 것으로 미뤄 마을 대부분 지역에 매장문화재가 분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구석기 유물이 발견된 마을 남쪽 구릉 일대에서는 고려 시대 일휘문(日暉文·원형 돌기 문양) 막새, 상감청자 조각, 전돌, 용두(龍頭) 장식 조각 등 통일신라부터 조선 시대의 유물이 확인됐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등 DMZ 국제평화지대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비무장지대 실태조사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태봉 철원성, 고성 최동북단 감시초소(GP) 등 총 40여 곳을 대상으로 내년 5월까지 이어진다.

이순녀 선임기자 coral@seoul.co.kr



정치 > 통일

연락 통로 전부 막힌 남북...정부 대북사업 구상 '먹구름'

9일 정오 기점으로 남북 통신·연락 채널 단절
북한 향한 우리 정부 일방적 러브콜 계속될지 주목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2020-06-10 07:30 송고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밤 평양 5.1경기장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경축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에 입장한 뒤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2018.9.19/뉴스1 ©News1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북한이 9일 정오를 기점으로 남북간 통신·연락 채널을 모두 차단하면서 우리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던 대북 정책에 먹구름이 끼게 됐다.

10일 통일부·국방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전날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 및 함정 간 국제상선공통망(핫라인)을 통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북측은 전혀 응답하지 않았다. 더불어 북한은 전날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통해 대남 사업을 '대적사업'으로 돌리고 남한을 적대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남북 간 통신·연락 채널을 일방적으로 끊고, 대북사업을 대적 사업으로 돌리면서 우리 정부가 구상하던 대북 정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초 대북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대통령 신년사, 3·1절 기념사 등을 통해 '남북 협력'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됐다. 문 대통령은 "북미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남북관계 속도전을 낼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또 4·15 총선이 여당압승으로 끝나면서 대북 정책 구상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았다.

올해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한창이었을 때 북측에 보건·방역협력을 제안했다. 또 4·27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아 동해북부선 건설 사업의 시작을 알리며, 남북 철도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의 접촉 허용 범위를 넓히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추진, 5·24 대북제재 조치 실효성 상실 발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판문점·철거감시초소(GP)·비무장지대(DMZ)·한강하구·파주 남북협력센터 등 접경지역 방문이 줄이어 진행됐다.

지난 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았던 담화 이후 통일부는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북측의 호응은 없지만 대북사업 시동을 걸기 위한 '시그널'을 계속 보냈다.

현재 북한이 공언한 '개성공단 철거' '9·19 군사합의 파기' 등 최악의 상황까지 이행하지는 연락 채널 차단, 대남사업을 대적 사업으로 규정하는 등의 이유로 남북협력 사업에도 브레이크가 걸렸다는 분석이다. 사실상 남북 간 쉽게 연락 자체가 닫히고, 한동안 북한이 남측을 향해 긍정적인 호응을 할 것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향후 남한 내부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여전히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동해북부선 사업은 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의미가 있으며, 대북 전단 살포 금지를 위한 법안 제정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활 개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상황을 비관하지 말고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뉴스1과 통화에서 "아직까지 북한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나서지 않은 부분은 우리가 풀어갈 여지가 있다는 것"이라면서 "북한이 지적인 대북 전단 살포 문제를 해결하는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남북관계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무부 “北 행동에 실망...외교 협력 복귀 촉구”



사진 | 뉴스1

북한이 남북을 잇는 모든 통신 연락선을 완전 차단·폐기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미국이 이례적으로 ‘실망’이라는 표현으로 입장을 전했다.

9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국은 언제나 남북 관계의 진전을 지지해왔다. 최근 북한의 행동에 실망했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북한이 외교와 협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는 북한과 관여하기 위한 노력과 관련해 우리의 동맹인 한국과 긴밀한 협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조선중앙통신은 “2020년 6월 9일 12시부터 북남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유지해오던 북남당국사이의 통신연락선, 북남 군부사이의 동·서해통신연락선, 북남 통신시험연락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와 청와대 사이의 직통통신연락선을 완전 차단·폐기한다”라고 말했다.

이후 통일부는 연락 개시 통화를 시도한 뒤 “금일 오전 공동연락사무소는 예정대로 북측과 통화연결을 시도하였으나, 북측이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정부는 “남북 간 통신선은 소통을 위한 기본 수단이므로, 남북 간 합의에 따라 유지돼야 한다”고 입장을 말

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Copyright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